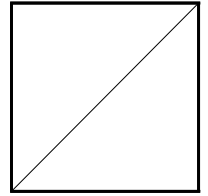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14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1. 12. (제 20 차)

의
결
사
항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11. 12.

1. 의결주문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대신증권(주)에 대해 영업점 폐쇄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의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원칙 등) 제2항,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2항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제24차~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0.29., 11.5., 11.10.) 심의필
- 제21차, 제2차, 제3차 및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2020.11.25., 2021.1.20., 2.3., 2.8.) 심의필
- 제4차, 제6차, 제8차, 제14차 및 제20차 안전검토 소위원회 (2021.2.26., 2021.3.26, 4.23., 7.16., 11.5.) 심의필
- 청문 실시(2021.8.6.)

<별지>

대신증권(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영업점(○○○○센터) 폐쇄

- 조치사유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420조 제3항

☐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 (前 ○○○○센터장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63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 (책임 ⊗⊗⊗) 과태료 2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2. 조치사유

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대신증권(주) ○○○○○센터는 '××.⊕.⊖⊖.~'××.⊠.⊡⊡. 기간 중 <펀드 ◀◀◀건(◆◆◆◆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구 분		고객 수(명)	금액(억원)
(1) 적합성 원칙	① 투자성향 파악전 투자권유	▲	□ □
	② 투자자 정보파악 소홀	△	■ ■
	③ 정보확인서 유지·관리 소홀	▶	□ □
	소 계	▽▽	□□
(2) 부 당 권 유		△ △ △	■ ■ ■ ■
합 계		▲▲▲	◆◆◆◆

(1)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 ○○○○센터 前 센터장 ○○○○ 등은 'xx.Ⅲ.●●.~'xx.Ⅳ.●●.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 투자성향 파악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센터 前 센터장 ○○○○ 등은 'xx.Ⅷ.Ⅸ.~'xx.Ⅲ.Ⅳ.Ⅴ.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 고객 설명자료* 등에 “연 8% 이상 준확정금리”,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수차례의 투자설명회(20xx.ⅩⅩ월~20xx.ⅩⅢ월)에서도 동일하게 거짓·단정적 판단이 포함된 자료로 부당권유한 사실이 있음

* 공식적인 상품제안서와는 별도로 조직적으로 제작·공유하여 이를 투자권유에 활용

※ ○○○○은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년('20.ⅩⅩ.Ⅹ.), 2심에서 징역 ■년 및 벌금 ■억원 선고('21.Ⅹ.ⅩⅩ.)

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 ○○○○센터 前 센터장 ○○○은 20××.△.▣.~2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부 책임 ⊗⊗⊗은 20××.▽.◎◎.~20××.□□.▼▼.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 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 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15